

'5·18 단체와 특전사 화해' 물의 빛은 대국민공동선언 파기하나

단체장 실각·사죄 수순 이어져 선언문 '유명무실' 특전사화도 내부 갈등 이어지고 부정적 분위기 '개인 영달 의심...진정성 보이고 실제 파기해야'

5·18민주화운동 양민 학살 가해 당사자 공수부대원들이 소속된 단체에 광주시민 동의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논란을 일으킨 2·19대국민공동선언문(선언문)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5·18 단체장이 잇따라 관련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특전사 단체 관계자가 실각하면서 선언문이 합의 1년 만에 유명무실해진 상황에 실제 파기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중앙회 등에 따르면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은 지난 1일 단체 회원들이 모여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대의원 선거 결과 단체 정상화에 다가섰다는 내용의 글에는 선언문 발표로 인한 광주 지역사회의 혼란 조래와 관련된 입장이 담겼다.

그는 단체 내부에서 불거진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운을 떼면서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어 '5·18민주공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된 2·19특전사화해선언(2·19대국민공동선언)과 정윤성역사공원조정사

업 반대에 대해 죄송하다고 적시했다.

또 단체 내부에서 불거진 특정 회원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선출된 대의원들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부상자회와 함께 대국민공동선언식에 참여한 공로자회는 정성국 전 공로자회장이 단체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선언문 폐기 등을 내건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로자회 운영 방침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 선언문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선언문의 발단이 '단체의 미래와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개인적 삶에 대한 애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 오늘날 해당 선언문의 취지가 '5·18 학살 세력의 포용으로 왜곡·발전됐다'며 폐기 의사 결정의 배경을 알렸다. 이처럼 선언문 조인을 주도했다가 훗날 사죄·폐기 의사를 표명한 5·18 단체장들은 현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돼 권한을 잃은 상황이다.

나아가 특전사회 중앙회 내부는 선언문 이행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오는 4월 2기 집행부 출범을 앞둔 특전사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총재 후보를 주렸다. 현 총재는 최익봉 중앙 예비역으로 외부 단체와의 교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연임이 가능한 최 총재가 차기 총재 후보에 들지 못하고 사실상 실각, 5·18 단체와 대표로 합의한 선언문 내용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최 총재의 실각에는 단체 수뇌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 출신 전역자들로 이뤄진 특전사회 내부 단체 성우회는 지난해 특전사회 집행부에 '5·18 단체와 일체 교류하지 않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성우회 막내격인 최 총재가 이를 어기고 5·18 단체와 교류를 강행한 것이 성우회를 포함해 단체 내부에서 크게 반발을 샀다.

결국 특전사회는 선언문 후속 행동으로 추진했던 자체 5·18 조사위원회 활동을 무산시키고 중앙회 차원 5·18 단체와의 교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특전사회 중앙회 한 고위 간부는 "최 총재 개인의 영달을 위해 5·18 단체를 끌어들이고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오늘날 회원들의 중론"이라며 "5·18 단체, 나아가 광주 지역 사회와의 화해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 선언문 파기를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광주 시민 단체는 선언문 발표 사과 의사를 전해오는 단체장들의 행동에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실제 파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특정 5·18 유공자의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에서 불거진 단체 내용의 중심에 서있었고 이사회를 통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 지지층 규합을 위해 관련 발언을 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월정신지지기 범시도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선언문은 역사 왜곡 문단이 포함되었고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만큼 파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사과와 후속 논의에 그쳐선 안된다. 조만간 입장문을 정리해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상자회 한 회원도 "(황 전 회장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활동을 마치 동지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지"라며 "진정 단체 정상화를 원한다면 속고하고 조종하 뒤에서 지원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회는 지난해 2월 19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저지른 학살 만행을 '군인으로서 명령에 의한 공적 직무를 수행

한 과정이었다'고 정의했다.

또 계엄군에 대해 '민주 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 아니다'며 '그 다수가 오늘날까지 정신·육체적 아픔으로 점철해왔던 점에 따라 피해자로 봐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5·18 단체와 특전사회는 5·18 피해 당사자와 계엄군을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시비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며 '양측 모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양시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 의도가 있다며 즉각 반발, 199개 단체가 연합한 대책위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선언문 폐기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비가 와도 괜찮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18일 오후 제주도 초청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바다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제주 낮 최고기온은 17~20도(평년 10~12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 진료중단 막기 위해 촛불들자"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생명 내팽개치는 행위"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18일 보건의료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구성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생명 및 직결된 업무

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따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 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호소한 범국민행동으로 ▲

집단 진료중단부·휴진에 참가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에게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 집단 진료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공유하기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정상화 실속 ▲집단 진료중단·휴진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들에게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고시텔서 기초수급자 숨진채 발견

요양병원 퇴원 후 홀로 거주한 60대...범죄 혐의 없어

광주의 한 고시텔에서 홀로 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광주 북구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고시텔에서 A(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를 하던 고시텔 주인이 발견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다가 지난 8일 해당 고시텔에 입주해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24시간 이내 통화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 A씨가 숨진 지 하루 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렇다 할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권기자

구례 축사서 불...돼지 800마리 소사

구례 한 돼지 사육 축사에서 난 불로 돼지 800마리가 소사, 역대 재산 피해가났다.

18일 구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8분께 구례군 간전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축사 5개 동 중 1동이 모두 탔으며, 자돈(새끼돼지) 800여 마리가 소사했다. 소

방서 추산 재산피해는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시간 4분여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 점검 확대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건축공사 대상을 연면적 1000㎡에서 660㎡로 확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으며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 현장은 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 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도 점검한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이며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40년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1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강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금과 건축경관 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